

마르크스주의 화폐이론에서의 몇몇 난제들에 관한 연구

이 채 언(전남대 경제학부)

1. 머리말

적어도 화폐이론이라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물음에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화폐의 본질: 화폐는 물품(상품)인가, 신용인가, 아니면 단순한 상징으로서의 국가주권의 표현인가? 시장경제에 공짜가 없어야 한다면 단순한 상징이나 신용만으로는 화폐가 계속 유통되어질 수 없지 않은가? (2) 통화량과 물가: 케인즈와 마르크스는 화폐수량설을 부정했다. 최근의 QE도 수량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면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악성인플레이나 80년대 남미의 악성인플레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3) 이자율: 통화량과 이자율은 무관하다고 R. L. 레이(R. L. Wray, 2001, 2010)나 S. 벨(Stephanie Bell, 2001) 같은 포스트케인즈의 주장을 영란은행이 2014년 9월 자체 기관지에서¹⁾ 그동안의 교과서적 설명을 부정하고 이자율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외생변수이고 거기에 맞추어 대부자금을 위한 수요가 저절로 발생하면 은행은 그 수요에 맞추어 자금을 공급하면 되었다고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는 이자율에 관한 마르크스의 종래의 주장이 처음부터 옳았음이 입증된다. 그렇다면 물가, 화폐이자율, 환율 같은 명목변수들 상호간의 관계는 현실에서 어떠한 것일까? (4) 주류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소위 화폐의 중립성이나 이분법 같은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화폐이론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설명은 마르크스경제이론이 주류경제이론에 대한 이론적 우열을 다투거나 마르크스경제이론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이슈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할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시도했다. 고전파경제학의 화폐배일관이 그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짐작되고 역사유물론적인 화폐금융이론, 즉 화폐와 금융은 물적 생산과는 동떨어진 상부구조에 속하는 그림자이므로 하부구조에 속하는 실물경제가 더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 생산과정에서의 잉여가치의 생산과 그 배분이 자본주의경제에서는 물적 토대를 이루므로 화폐와 금융까지도 종국적으로는 이 물적 토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 것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된 잉여가치에 대한 최우선적 배분권한을 행사하는 지배적 힘을 가진 것이 화폐와 금융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는 화폐와 금융을 능가할 경제영역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연유로 그동안 화폐·금융 분야의 연구는 자본가계급 중에서도 가장 상층부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의 전유물로 방치되어 그 음습한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마르크스이론의 연구자 다수는 일찌감치 그 문제영역을 포기하거나 아예 외면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지배엘리트 내부의 균열은 많은 금융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대열로부터 이탈하여 그동안의 금융계에서 자행된 산더미 같은 비행과 비

1)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Pages/quarterlybulletin/2014/qb14q1prereleasearticlemoney.aspx>

리, 불법과 위법을 고발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촉발시켜주고 있다. 지배엘리트 내부의 이런 균열은 이번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는 바로메타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마르크스의 화폐이론을 다시 연구하는 것은 지금 절대적으로 시급한 역사적 요청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썼다. 먼저 제2절에서는 화폐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화폐는 물품화폐인가, 신용화폐인가, 아니면 국가주권의 표현인가를 논의한 뒤 제3절에서는 물가수준과 이자율수준 및 환율이 통화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논의한다. 제4절에서는 불환지폐의 세계화폐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입장을 소개한 후 제5절에서 이 글을 끝맺음한다.

2. 화폐의 본질

‘화폐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주류경제학의 교과서는 ‘교환의 매개물’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교환의 매개물이란 화폐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다.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기능을 화폐의 본질로 인식하는 것은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입장에서는 ‘기능’과 ‘본질’을 동일시하는 개념적 오류이다.

마르크스의 기본입장은 화폐도 노동생산물의 하나이고 일종의 상품이라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한다.²⁾ 그러나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 기능만 한다면 구태여 그 자체가 노동생산물일 필요는 없다. 노동생산물이 아니라도 상품이 될 수 있고,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교환의 매개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종류의 상품만 교환을 매개할 수 있지만, 교환의 매개물은 반드시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화폐가 아닌 화폐대용물, 상품이 아닌 단순한 증표나 지불약속만으로도 교환의 매개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론』 제3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화폐는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이라야 한다고 본 이유는 상품이 아닌 단순한 증표나 지불약속만으로도 화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화폐는 반드시 금이라야 한다고 마르크스가 강조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시장경제엔 공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증표나 상징으로 화폐를 대신하여 유통시키더라도 증표나 상징은 어디까지나 비(非)노동생산물이니 공짜로 만들어낸 부호와 같다. 공짜가 최종적인 결제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종결제는 반드시 노동생산물인 현물로 지불해야 거래가 완결될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지불연기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채무증서, 신용화폐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칙상 시장경제에서 언제까지고 지불연기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언젠가는 압류나 개인파산 같은 법적조치로 반드시 끝맺음해야 하는 때문이다.

둘째는 화폐의 가치척도기능 때문이었다. 길이를 재는 자가 다른 물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물건과 비교할 수 있는 길이를 자신이 지니고 있어서 그 자체 안에 길이의 단위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무게를 재는 분동도 자신이 무게단위를 자체 안에 구분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가격이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것은 화폐 한 단위의 가치도 화폐의 자체 안에 가치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불환지폐는 노동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2)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모든 논의는 바로 이 명제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있는가? 그러니 불환지폐가 화폐로 될 수는 없고, 겉으로는 불환지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 화폐의 대용물, 혹은 금화폐로의 지불을 약속하는 신용화폐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꼭 내재적 가치를 지녀야만 가치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고 용수철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내재적 길이나 내재적 무게를 미리 간직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외생적으로 그 단위를 미리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가 없어도 가치척도는 될 수 있다.

셋째는 마르크스 논리전개의 방법론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상품 속에 내재하는 두 대립물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교환과정을 통해서 외재적인 두 대립물로 외화(外化)하여 (externalized) 각기 자립적 존재가 되는데 사용가치의 화신(化身: incarnation)인 일반적인 상품과 교환가치의 화신인 화폐로 자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환가치의 화신으로 자립한 화폐에도 화폐로서의 사용가치(사용가치일반으로서의 특수한 사용가치)와 화폐의 교환가치(일반 상품에 대한 구매력)가 대립물로서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사용가치의 화신으로 자립한 일반 상품에도 각 상품특유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여전히 서로 대립물로서 내재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수정란이 신체의 여러 다른 기관으로 분화하기 위해 분열해나가는 발생학적 과정과 같다고 보았다. 즉,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던 수정란이 각기 다른 기관으로 분화하지만 각각의 다른 기관은 여전히 세포분열 이전과 똑같은 DNA를 유전자정보로서 담고 있다. 상품일반(the commodity in general)이 화폐와 일반상품(general commodities)으로 분열해서 서로 자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두 대립물이 여전히 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욱이 화폐가 온갖 종류의 대용화폐, 토큰, 신용화폐, 물품화폐 등을 파생시키며 스스로 유통세계를 이탈해서 퇴장된 채 있다가 일정금액이 축적되면 갑자기 자본으로 비약하는 과정을 마르크스는 <알→애벌레→번데기→나비>로 나아가는 계통발생학에 비유하였다. 퇴장화폐가 일정액 이상 축적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치 애벌레가 스스로 번데기가 되어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에 비견되었고, 그것이 나비로 날아오르는 것은 유희상태에 있던 화폐가 갑자기 자본으로 비약하여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로 변신하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이론에서는 화폐가 논리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상품범주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상품과는 다른 애벌레, 나비로 비약할 수 있는 특별한 애벌레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르크스경제학자들에게는 이 원리가 그다지 깊이 체득되어 있지 않았던 같다.

아니나 다를까 1971년의 금-달러 태환정지 이후 마르크스경제학은 극히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불환지폐가 정상적인 화폐로 얼마든지 잘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폐가 노동생산물의 하나인 상품이라고 계속 우길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놓고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은 두 부류로 갈라졌다. 하나는 신용화폐이론이었고³⁾ 다른 하나는 국정화폐이론이었다.⁴⁾

신용화폐이론에 의하면 화폐와 신용화폐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신용화폐라도 화폐와 똑 같은 기능을 전부 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짜 화폐는 여전히 금이지만 화폐의 기능을 금이 다 도맡기에는 너무 벅차므로 신용화폐가 대신 화폐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국정화폐이론은 실거래에서 사용할 결제수단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국정화폐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화폐가 더 이상 상품범주에는 들 수 없는 별개의 존재로 간주되므로 마르크스의 원래의 입장에서부터의 분명한 이탈이다. 우선 신용화폐이론부터 살펴보자.

3) Duncan K. Foley (1982), Alain Lipietz (1994), Riccardo Belliofiore (1989), etc.

4) Warren Mosler (2010), L. Randall Wray (2001, 2010), Stephanie Bell (2001), Bill Mitchell (2009, 2010), etc.

신용화폐는 약속어음을 그 원형으로 삼고 있다.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지만 일시적으로 화폐가 없을 때, 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제공하고 B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약속어음이 바로 신용화폐의 원형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거래상 밀접한 분업관계를 이루어 사실상의 공동운명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한쪽이 현금부족으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다른 쪽은 판매부족으로 재고가 쌓인다. 예전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언제 지불하겠다는 약속어음만으로도 물건을 빨리빨리 처분하는 것이 판매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B는 그런 식으로 양도받은 약속어음을 제3자인 C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현금 대신 유통시킬 수 있다. C에게 양도하는 약속어음의 뒷면에 A가 지불을 못할 때에는 B가 대신 지불하겠다는 보증이 서명되어 있다. 이렇게 유통되는 것이 신용화폐인데 여기에는 ①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지불만기일, ②지불만기에 이르러 지불해야 할 이자, ③채무자가 지불 못할 경우의 타인에 의한 대리지불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서명이 들어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현금화폐는 신용화폐와 전혀 다르다. 현금화폐에는 만기일과 이자가 따로 없으며 중간의 지불보증인도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화폐(계좌이체로만 거래되는)도 이론적으로는 신용화폐의 하나이나 두 가지 점에서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즉, ①만기일이 별도로 없고 현금이 언제라도 필요하면 즉석에서 현금을 지불해준다고 보증하는 일종의 현금보관증이며, ②약속어음에는 있던 중간거래인들의 지불연대보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에서 예금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은 일단 지불하면 그 자체로 지불의무가 완결되어버린다. 그것의 최종수취인이 현금을 필요로 할 때엔 그 최초의 발행자에게만 지불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은행이 지불불능에 이르면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기로 보증하고 있어서 사실은 현금과 똑같아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대신 지불할 수 없게 되면 <예금화폐=화폐>란 인식이 무너진다. 현금만이 화폐일 수 있고, 예금화폐는 평상시에나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 미흡한 화폐로만 남는다. 현금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현재의 금’이라야 하지만 오늘날은 불환지폐를 현금이라고 부른다. 어째서 그게 현재의 금인가? 각종 세금납부나 채무변제 의무는 순전한 법적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의 이행은 법으로 정한 방법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법으로 정한 ‘최종적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원래는 물품으로서의 금이었으나 지폐를 금 대신 사용해도 좋다고 법으로 허용하면서부터 그것도 법화(법률적 화폐)로서의 화폐가 되었다. 이것이 국정화폐이론이다 (L. R. Wray, 2004 참조).

국정화폐이론이 옳다고 받아들여지면 화폐는 국가가 처음부터 먼저 존재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폐는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자유도시의 시장 또는 국경과 국경사이의 시장)에서부터 생겨났다. 국가의 존재여부에 따라 물론 화폐의 형태나 기능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국가의 존재여부에 따라 화폐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식의 주장은 화폐발생의 역사에 비추어 맞지 않다. 마르크스의 방법론은 상품의 발생학 내지 계통발생학적 분화과정을 통해 화폐, 계급, 사회구조, 국가를 설명한다.⁵⁾ 물론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우리가 꼭 지킬 이유는 없다. 다른 것이 옳으면 언제라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달러의 금-태환 정지 때문에 마르크스의 방법을 폐기할 지경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금-태환제도야말로 일물일가 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서 폐지되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마르크스의 방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횡포에 불과한 때문이다.

금-태환제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금을 팔아주겠다’는 법적인 약속과도 같았다. 이는 금

5) 이채언,

에 대한 이중가격제도에 불과하다. 금의 시장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의 법정가격을 국가가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일물일가법칙을 유린하는 것이다. 금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더 이상 법정가격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은행에로의 태환요구가 폭주하고 화폐혼란을 초래한다. 이때문에 태환제도의 폐지가 당연히 요구된다. 불환지폐는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그러나 노동생산물도 아닌 종이쫄가리가 화폐로 기능하는 것을 보고 화폐는 반드시 상품이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종래의 화폐이론을 그들은 미개인들의 미신에 불과했다고 서둘러 단정했다. 그리고는 마르크스가 지폐유통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마르크스의 화폐이론도 그 틈에 폐기해버린 것이다.

상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노동생산물일 이유도 없지만 노동생산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품인 것도 아니다. 인간노동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처녀지도 상품으로 거래되고, 임자 없는 웹페이지의 사이트 주소도 상품으로 사고판다. 마르크스주의 가치이론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다른 범주로 취급한다. 웹사이트의 주소 같은 무형자산, 현금이나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 토지나 예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실물자산을 전부 '일반상품'과는 구별되는 '자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일반상품은 의식주에 소용되는 생필품처럼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에너지나 철광석처럼 '생산적 소비'를 목적으로 재생산되는 것들인데, 자산은 생산적 소비든 개인적 소비든 소비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산도 겉으로는 일종의 상품처럼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생산적 혹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일종의 채권-채무관계'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내가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 담보물로 토지를 양도받는 것이고, 양도받았던 토지를 되파는 것은 제3자에게서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전세형태로 임대를 놓는 것도 제3자로부터 돈을 다시 유통해서 빌리는 방법인 점에서는 같으나 소유권만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개인적(주거용)으로나 생산적(공장부지)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또 그러는 동안 시장가격이 변동할 수도 있다. 가공자본이란 개념은 마르크스가 처음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그가 어떤 개념으로 가공자본이란 개념을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정의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여기서 가공자본의 정의를 새로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종류의 자산은 채권-채무관계의 표현이다. 자산의 가치는 그 채권-채무관계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자산 가운데는 자산의 가치를 담보할 채무자가 구체적 개인이 아닌 무기명의 제3자일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실제로 팔기 전에는 임자가 누구일지 모르는 경우, 그 자산의 가치는 가공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필자는 가공자본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자산의 가치는 따라서 수시로 변동한다. 자산가치의 총액은 자산보유자 그룹이 그 사회구성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채무관계의 현재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다. 개개의 자산보유자로서는 자산가치의 절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회전체 가치총액 가운데 그 자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중요하다.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평균치보다 적게 하락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평균치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별 자산가치의 상대적 변동은 자산보유자끼리 사회적 부의 서열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지를 태초에 상품으로 판매했던 자는 공동체의 사회적 공유지를 사유지로 횡령한 자였고 그것을 구매한 자는 장물아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토지보유자들도 일반상품의 보유자처럼 피땀으로 번 돈으로 토지를 구매한 자들이고 그 자산은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노동생산물이기도 하다. 토지가 그러하듯 불환지폐도 처음 발행될 때에는 노동생산물이 아니었지만 일반인들이 유통에서 벌어들인 화폐는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고 노동생산물이기도 하다.

누구나 불환지폐를 자유로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생산물도 상품도 될 수 없다. 그러나 불환지폐를 발행해서 유통에 투입할 특권을 가진 사람은 일반상품 생산자가 아니다. 그들은 교환세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비생산자계급(the non-producers) 혹은 기생계급(the parasites)에 속한다. 그들에게만은 화폐가 노동생산물이 아니다. 그러나 상품교환세계의 내부에 있는 일반상품생산자에게는 공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엄연한 노동생산물이다. 금화가 유통되던 시대에 금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화폐로 사용해야 했다. 세계시장에서 금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의 노동생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토지나 불환지폐를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상품생산자의 입장에서 노동생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환경제 내부의 일반상품생산자에게는 불환지폐를 처음 구입할 때의 획득비용이 바로 일반상품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금의 생산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물가와 이자율

전반적인 물가상승,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의 증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르크스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 가치이론에서는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가치(또는 생산가격)와 화폐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고 통화량과는 무관하다.

즉, 상품가격(p_i)은 상품가치와 화폐가치의 비율에 의해 미리 정해지고, 상품거래량(x_i)도 생산에서의 분업연관과 그 상품의 가격수준에 따른 수급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상품거래 총액($\sum p_i x_i$)도 통화량과는 무관계하게 시장에서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화폐유통속도(V)로 나누면 '유통에 필요한 통화량'이 주어진다. 그리고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증가할 때 그것에 부응하여 유통화폐량(통화량)이 같이 증가 해야 하는데, 만약 통화량이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만큼 증가하지 못하면 신용화폐가 화폐대용으로 발행되어 그 부족량을 메운다.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순수거래비용(유통공비)으로서, 구매자든 판매자든 누군가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가 상승한 결과이지 그 원인일 수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이론이다.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보다 통화량이 더 많이 발행되는 일은, 화폐의 발행비용이 거의 무시할 수준인 불환지폐나 전자화폐가 아닌 한 원칙상 있을 수 없지만,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제대로 분포되어 있지 않는 한 얼마든지 통화량이 총량적으로는 넘쳐나도 실제거래에서는 늘 부족할 수가 있고 신용화폐도 필요량 이상으로 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에서는 아직도 통화량의 증가를 인플레이의 원인으로 본다. 물론 역사적으로 주류경제학의 이런 관점은 이미 여러 차례 반증되어 왔다.⁶⁾ 최근 금융위기 이후 미국 달러의 양적완화만 해도 그러하다. 미국이 화폐를 매년 1조 달러 이상 신규로 추가발행하고 있음

6) Thomas Tooke (2015),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State of the Circulation during the Years 1703-1856, Forgotten Books Publisher (6 vols., 1838-1857).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물가는 그다지 상승하지 않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의 양적완화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도 가치이론이라는 훌륭한 이론적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환화폐의 등장 이후부터는 상품가치와 화폐가치의 비율 자체를 계산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함으로써 수량설을 암묵적으로 수용했다. \

다른 한편, 주류경제학에서 화폐수량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수량설 말고는 인플레이션을 달리 이론적으로 설명할 대안이 없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즉, 불환화폐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통화량의 증가가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화폐발행비용도 그 전부터 이미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과는 다르게 화폐의 본질이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에 있지 않고 관념에 있다는 것을 일찍 간파하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3.1 관념화폐와 화폐가치

상품가격은 상품가치와 화폐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먼저 화폐가치부터 결정되어 있어야 상품가격이 결정된다. 물품화폐일 경우는 화폐소재의 노동가치에 의해 화폐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화폐가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이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일 필요가 없었기에, 화폐가치는 화폐소재의 가치와도 일치할 필요가 없었다. 마르크스는 그것을 화폐의 관념화라고 불렀다.

화폐가 교환영역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하면서부터 화폐는 처음의 물품형태를 벗어나 관념적 형태의 화폐로 점차 승화하기 시작했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이미 화폐가 관념화폐로 승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화의 가치가 금속소재의 가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었다. 이를 마르크스는 화폐의 관념화라 불렀는데 이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다.

금덩어리형태로 화폐가 유통될 때에는 무게로 금 1프랑이었으면 화폐단위로도 1프랑이어야 했다. 그것이 주화형태로 유통된 것은 순수거래비용 때문이었다. 금덩어리로 화폐가 유통되면 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금의 순도와 무게를 일일이 측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의 제3자에 해당했던 국가가 거래당사자들을 대신하여 금의 순도와 무게를 미리 측정해서 공식적인 인증을 표해주었다. 국가가 무료로 공인작업을 해주었으면 좋았겠으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속가치의 무게만큼 무게단위로서의 1프랑과 화폐단위의 1프랑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화폐 1프랑은 더 이상 무게로서의 1프랑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고 화폐의 단위가 무게단위와는 다른 별개의 계산단위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화폐관념화의 첫 단계였다.

두 번째 단계의 관념화는 주화가 유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멸되고 손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내용은 예전의 화폐와 동일한 것처럼 간주되면서 유통되었다. 주화의 금속내용물이 유통과정에서 마손되었을 때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반드시 보충해야만 한다면 어느 개인도 스스로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 되었으면 주화유통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사적지출로는 금속내용물의 손실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주화로 용인해왔다. 그러나 주화의 마손 정도가 심하여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낡은 것을 화폐로 받아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그럴 경우 그 마지막 순간에 마손된 화폐를 손에 진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동안의 마손된 금속내용물을 보충할 비용을 혼자 몽땅 뒤집어써야 한다(차라리 그는 화폐의 금속내용물을 보충하기보다는 녹여서 금덩어리로 팔아버릴 것이다). 마손된 화폐가 그런 식으로 화폐기능을 정지당했다면 화폐의 관념화는 아마 거기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관념화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들은 아예 금 대신 값싼 구리나 청동 혹은 종이로 만든 화폐를 유통시키고 국제거래에서 꼭 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금으로 교환해주는 금본위제도를 고안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의 관념화였다.

세 번째의 관념화(금본위제도)는 국내통화를 국제거래를 위해 금덩어리로 교환해주는 비율을, 이를테면 <화폐 1프랑 = 무게 0.01프랑의 금>과 같은 식으로 법제화하는 데서부터 생겨났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일반인들에게는 지폐의 가치가 처음에는 미정인 상태였는데 지폐가 일정한 가치를 지니도록 법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금본위제도라는 관념을 낳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금-태환비율을 화폐의 단위가치를 법으로 지정하는 ‘가격의 도량표준’이라고까지 불렀다. ‘화폐단위 1프랑과 금속의 무게단위 1프랑은 각기 같은 명칭을 사용하긴 하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혀 상이한 별개의 단위’라는 사실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금-태환비율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과는 달리 이 등식은 화폐의 가치를 규정한 것이었기보다는 금의 이중가격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의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 별도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미리 법정가격을 부여하여 강제하는 꼴이 되었다. 이 불합리성은 빈번한 금태환요구의 쇄도를 초래하여 화폐유통을 자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최종 해결책은 금의 이중가격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마치 화폐가치가 처음부터 금의 가치와는 완전히 별개인 독립된 존재였다는 추론까지 낳았다. 여기서 화폐의 관념화는 네 번째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네 번째 단계의 관념화에서 화폐는 실제의 금으로부터 완벽하게 결별한 추상적 계산단위로 승화한다. 관념적인 추상적 계산단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화폐가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상품가격, \$102.00, €73.00으로 표현되었다. 수량설도 바로 이런 관념 위에서 서 있다. 즉, 화폐는 관념적인 추상적 단위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해가는 과정에서 통화량과 상품거래총액 사이의 1:1 대응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가격으로 실체화(hypostatized) 되어졌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와 통화량의 관계에 대한 과거 우리들의 논의가 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품화폐의 관념화폐로의 승화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늘 양자를 혼동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화폐가 금으로부터 완전 결별하여 추상적 계산단위로 되기까지는 물론 성공했지만, 자기가 타고난 상품화폐로서의 숙명만은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상품생산사회에서는 공짜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관념화폐를 발행해 유통시킬 권한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상품생산사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점차 관념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순수거래비용 즉, 유통공비(流通空費: faux frais de production) 때문이었다. 원칙상으로는 상품의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최종상품가격으로 다 이전되거나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수거래비용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공비(空費)였다. 이 유통공비는 상품가격으로 이전되거나 포함되지 못하기에 누군가의 개인적 손실로만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느 개인도 자신의 개인적 손실로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기술적 용어로는 순수거래비용이지만 정치경제학적으로는 ‘교환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비용이었다. 상품은 개별생산자의 사적(私的)인 생산물이지만 처음부터 그 목적은 사회적으로 소비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성격의 생산물이다. 교환과정에서는 그 때문에 순수거래비용이 유통공비로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화폐의 관념화였다. 화폐의 명목가치보다 화폐소재의 가치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관념화는

상품교환세계의 원칙, 즉 공짜가 허용되지 않는 교환세계의 본성에 유감스럽게도 부합될 수 없었다. 관념화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발행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씩의 관념화만 허용되었는데, 관념화를 불허하는 상품생산사회의 본성과 관념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유통과정 사이의 모순이 임계점에 이를 때마다 빈번한 화폐위기로 폭발하였고 그런 고비마다 화폐제도는 조금씩 진화되고 관념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환지폐제도가 등장했고 이제는 전자화폐 단계까지 앞두고 있다.

상품교환세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비생산적 기생계급(정부나 금융기관)은 상품생산자들에 대해 조세징수권을 갖고 있거나(정부의 경우)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생산수단을 ‘사회적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금융기관의 경우). 그 때문에 그들은 구태여 상품을 직접 생산해서 교환하지 않아도, 조세수입이나 이자수입 혹은 임대료수입으로, 필요한 상품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그 유통공비를 부담하는 해결사가 된다. 그들이 수취할 조세나 채무이자, 임대료 등을 담보로 일종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상품생산자들이 조세나 채무의 변제를 위한 지불수단으로 이 채무증서를 사용토록 허용함으로써, 상품화폐 대신 유통되도록 한 것이다. 사회전체의 관점에서는 채무증서이지만 상품생산사회의 안에서만 보면 노동생산물의 일종인 화폐로서 유통되고 있다. 채무증서라는 불환지폐의 등장으로 상품교환사회 내부의 논리적 모순의 표현이었던 유통공비가 사회의 계급적 모순 속에 매몰, 포섭됨으로써 마치 해소된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들이 불환지폐로 유통계의 재화/서비스/자산을 징발할 때 화폐가 유통세계에 새로 유입되고, 유통계는 그들에게 재화/서비스/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그 화폐를 구입한다. 교환세계 밖에서는 종이와 잉크만 소요되었지만 교환세계 내부에서는 엄연한 노동생산물이고 상품의 일종이다. 금화가 유통될 때 금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해외로부터의 금의 수입가격을 금의 생산비로 가름했듯이, 마찬가지로 불환지폐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상품생산자사회의 내부에서는 외부로부터 구입한 불환지폐의 획득비용이 바로 그 화폐의 생산비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보조화폐로서의 지폐가 금화를 대신해서 유통될 경우 그 발행량은 실제로 유통되었을 금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지폐가 그것이 대표하는 금량의 x 배로 발행되면 가격의 도량표준(금의 법정가격의 역수)을 $1/x$ 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⁷⁾ 그러나 이는 동어반복이다.

‘실제로 유통되어야 할 금량(G)’은 금의 가치(v_g)를 1로 두었을 때 상품거래 총액($\Sigma p_i x_i$)과 유통속도(V)에 의해 주어진다. 즉, $G = \Sigma p_i x_i / V$ 이다. 금의 시장가치(v_g)가 1이 아닌 다른 값(v_g)으로 바뀌면, $G v_g = \Sigma p_i x_i / V$ 이 성립하므로 실제로 유통되어야 할 금량(G)은 $G = (1/v_g) \Sigma p_i x_i / V$ 이 된다. 금의 가치(v_g)가 1일 때에 비해 $1/v_g$ 배로 바뀐다. 그러나 금본위제도 하에서는 금의 시장가치(v_g)를 무시하고 가격의 도량표준(e : 금의 법정가격의 역수)을 화폐가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금본위제 하에서 실제로 유통되어야 할 금량(G^*)은 $G^* = e \Sigma p_i x_i / V = eG$ 이다. 따라서 금본위제 하에서는 지폐의 발행량(M)이 대표하는 금의 양(G^*)은 $G^* = Me$ 로 주어진다. 금 대신 지폐를 유통시키더라도 그래서 지폐의 발행량이 유통에 필요한 금량(G^*)의 x 배가 되더라도 즉, $M = G^* x$ 이 되더라도 금의 법정가격만 x 배로 즉시 고쳐주면(e 만 $1/x$ 배로 고쳐주면) 별문제 없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설명은 모든 지폐가 일단 발행되면 상품유통세계를 벗어나거나 퇴장되는 일 없이 전액 상품거래를 위한 유통수단으로만 사용된다고 전제한 위에서나 성립하는 얘기가

7) K. Marx, Capital, Vol. I, Pelican Books, 1970, pp. 224-5.

다. 그러나 아무리 불환지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반상품시장에만 전량 유통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퇴장될 수도 있고 (화폐의 구매력이나 물가와와는 무관한) 자산시장에서도 유통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론』 제1권의 제3장은 아직 자산시장 즉, 금융시장에 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폐가 전액 상품유통세계에만 머물 것으로 가정한 마르크스의 설명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그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유통에 필요한 금량과 지폐발행액을 항상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표준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아예 가격표준 자체를 없애버리면 두 발행액은 자동적으로 늘 일치한다. 오늘날의 불환지폐제도가 바로 그러하다. $M = Gv_g$ 이 항상 성립한다. v_g 가 1이면 금덩어리로 유통되는 금화폐제도이지만 v_g 가 1이 아니고 가변적이면 불환지폐제도이다.

3.2 화폐유통의 두 국면

화폐가 유통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상품, 다시 말하여 개인적 소비나 생산적 소비로 사용될 상품이 거래되는 <일반상품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보다는 보유를 위해 거래되는 실물자산/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자산시장>이다. 이 둘은 서로 (완벽하게 격리되지는 않지만) 격리된 두 시장이다. 전자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일단 구매자의 손에 들어가면 개인적 소비나 생산적 소비(투입물)로 유통계로부터 영구히 사라지지만 후자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유통계로부터 영원히 사라지는 법이 없다. 저축형태로 보유되어 언제라도 다른 자산의 형태로 전환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한 곳은 재생산 가능한, 즉 노동생산물이 유통되는 플로우(Flow)의 세계이고, 다른 곳은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소비보다는 보유가 목적인 스톡(Stock)의 세계이다.⁸⁾ 우리는 수중에 뭇 돈이 들어오면 시장에 나가 당장 소비할 목적으로 일반상품을 사기보다는 일단 자산시장에 나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구매하여 나중에 다시 화폐형태로 전환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그 돈을 일반상품시장으로 방향을 돌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자산시장에 그대로 두면서 새로 구매할 다른 형태의 자산을 물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 거기서 유통되는 화폐는 여간해서는 일반상품시장으로 빼들려지지 않는다.

<일반상품 시장>에 화폐가 추가로 유입될 경우, 그 유입은 교환(C-M-C')형태가 아닌 일방적 구매(M-C)의 형태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품시장 내부에 초과수요를 초래하여, 생산물의 증가로 공급이 즉시에 증가되지 않으면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자산시장>에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새 화폐가 유입되어도 추가적인 자산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산의 시장가치만 상승시킨다. 같은 가격상승이라도 <일반상품 시장>의 가격상승과 <자산 시장>의 가격상승은 다르다. 한쪽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화폐가치를 하락시키지만, 다른 쪽은 물가와와는 무관하다. 물가지수나 인플레이션의 계산에는 <일반상품 시장>에서의 가격변동만 고려되고 <자산시장>에서의 자산가격의 변동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가격변동이 일반상품의 거래와는 다른 원리, 즉 채권-채무관계란 맥락에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이나 골동품, 예술품 같은 실물자산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같은 원리에서 거래된다는 점부터 확인토록 하자. 첫째, 실물자산이든 금융자산이든 개인적 소비나 생산적 소비로 유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자산은 소비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만을 목적으로 거래된다. 둘째, 토지는 개인이 보유하기만 해도 임대료 같은

8) 귀금속과 일차산품은 양쪽 시장에서 다 거래된다.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도 마찬가지이다. 보유를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제품생산에 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일반상품시장에서도 거래된다고 볼 수 있다.

일정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주식, 채권, 외환이 상품화되었을 때에 생기는 배당금,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토지보유에서 제공되는 정기적인 수입은 이자율이 변동하면 토지 가격 자체의 변동을 유발하여 토지보유자에게 자산가치의 이득이라는 덤을 제공한다. 주식, 회사채, 외환의 보유자에게 덤으로 제공되는 자산이득 혹은 자산손실과도 같다. 넷째로 금융의 매개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산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여유자금을 지금 당장 현금에 필요해 토지를 팔려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다. 토지를 거래함으로써 그가 제공하는 신용에는 만기나 정해진 이자율이 별도로 없다. 언제라도 신용을 회수하고 싶으면 구매했던 토지를 시장에 내다 팔면 되고 원래의 채무자는 아니지만 토지를 구매해주는 제3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물론 토지를 상품화하는 데 실패하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진 부실채권처럼, 부실자산으로 된다. 주식, 채권, 외환, 예술품, 골동품, 지적재산권 등을 사고파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는 신용조달을 위한 담보물로 사용되어 필요할 때 언제라도 현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주식, 채권, 외환, 예술품, 골동품, 지적재산권 등도 같은 방식으로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 토지를 바로 시장에 내다파는 것보다 담보물로 사용하면 임대료나 배당금 같은 정기적 수입(임대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계속 누릴 수도 있고 가격상승에 따른 자산이득도 바라볼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특질을 염두에 둔다면, 자산가격의 인플레이는 일반적인 물가상승과는 달리, 채권-채무관계의 팽창, 또는 채무자가 누군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익명의 사람에 대한 미래채권(가공자본)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의 IOU도 은행 자신의 채무가 아니다. IOU에 대한 최종지불을 법정화폐인 또 다른 IOU로만 계속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을 영구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정작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사람은 IOU를 재화와 서비스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 비금융부문, 즉 실물부문의 생산자이다.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IOU의 양이 늘어날수록 금융기관의 IOU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 할 비금융부문, 실물부문의 생산자들의 채무부담이 같은 크기로 늘어난다. 또 그것으로 각종 자산가치가 인플레이 되면 비금융부문, 실물부문의 채무부담만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도 <자산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선물거래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물건을 양도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현재시점에서 전액 지불함으로써 그 권리를 획득한다.⁹⁾ 선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미래에 생산물을 양도하겠다는 약속 하나로 현재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화폐를 조달한다. 따라서 이것도 금융수단이긴 하지만, 현물거래에서는(부동산, 주식 등의) 채무자가 아직 누군지도 정해지지 않은 익명의 채권-채무관계였지만, 선물거래에서는 두 당사자끼리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맺는다. 옵션은 물건을 미래에 팔거나(풋옵션) 사겠다는(콜옵션) 약속을 사고파는 것이기에 이것도 신용조달 수단이 된다. 미래에 물건을 팔거나(풋옵션) 사겠다는(콜옵션) 약속을 하나의 권리로서 확보하기 위해 미리 계약금조로 현재시점에서 물건 값의 일부만 지불한 것이 옵션의 가격인데, 만기에 이르러 그 나머지를 정산하기로 되어있지만 그 때 계약한 가격과 만기시점의 시장가격을 비교해서 물건을 실제로 팔거나 샀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미리 지불했던 계약금을 아예 포기한 채 약속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가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다. 옵션에서 권리를 판매하는 사람은 계약금조의 작은 액수의 화폐를 현재시점에서 조달하는 대가로 자칫 만기에 이르러 그보다 훨씬 더 큰 승수배의 화폐를 지불할지도 모르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신용조달이다. 그러나 본인도 정녕 위험을 느

9) 고객에 따라서는 현재는 일부(증거금)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정산하기도 하지만 바로 현재시점부터 지불의무(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액을 현재시점에서 지불하는 것과 같다.

끼면 같은 옵션이나 선물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그래도 혹시 잘하면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용을 갚을 필요가 안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선물이든 옵션이든 파생상품은 손실을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제로섬 게임인 셈이다. 잃은 사람은 채무자로 추락하고 딴 사람은 채권자로 부상한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아닌 본 상품 즉, 부동산, 골동품, 예술품, 지적재산권 같은 실물자산이나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의 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 양쪽 다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이 되기도 하고 양쪽 다 손실을 보는 네거티브섬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쪽 다 이익을 본다고 해서 아무도 손실을 입지 않거나 양쪽 다 손실을 입는다고 해서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산가치의 전반적인 상승은 자산거래의 당사자 양쪽의 입장에게는 다 이익을 주지만, <자산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실물부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실물부문은 자산시장에는 참가하지도 않았는데도 부지불식간에 무기명 채무가 늘어난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일반상품 시장>으로부터 저축이나 임대료, 배당금, 이자수입 형태로 더 많은 가치가 <자산시장> 쪽으로 이전되게끔 예정되어 있다. 양쪽 다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자인 비금융적 부문에 대한 그들의 채권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므로 <자산시장> 쪽으로의 임대료, 배당금, 이자 같은 가치이전의 기대치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반상품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의 인플레이와 자산시장에서의 자산가격의 인플레이는 상호 어떤 관계에 있을까 임대료상승이나 이자율상승 또는 자산가치의 상승은 일반상품생산자들에게는 수익성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임대료나 이자율의 상승분을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반영하기에는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품생산자들의 수익을 축소시켜 제품생산에 대해 디플레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일반상품시장에서의 인플레이는 명목이자율의 상승이나 명목임대료의 상승 같은 형태로 쉽게 자산시장의 인플레이로 전이되어진다.

새 화폐가 유통세계로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갈래이다.¹⁰⁾ 첫째는 적자재정에 따른 정부지출의 증가이다. 이때는 새로 발행된 화폐가 온전하게 <일반상품 시장>으로만 유입되고 <자산 시장>으로는 유입되지 않기에 <일반상품 시장>에서의 초과수요를 초래하여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둘째는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다. 이때는 새로 발행된 화폐가 전액 <자산시장>으로만 유입되고 <일반상품 시장>에는 유입되지 않는다. 자산인플레이는 유발할 수 있어도 일반물가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재할인이나 시중은행 대부로 새 화폐가 유입되는 경로인데 이때 새로 발행되는 화폐가 어디로 유입될지는 시중은행에서 대부받은 자금을 토대로 예금화폐를 발행하면서 어떤 용처로 대부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조업을 위해 대부하면 <일반상품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그래서 물가를 상승시키겠지만, 반대로 자산계급을 위해 대부하면 자산거품의 붕괴를 방어할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대출정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금융당국에게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자산가치의 붕괴를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많다.

이처럼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는 새 화폐의 유입경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물가는 재정적자만 억제하면 통화량은 아무리 증가해도 상당한 정도로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금융자본세력과 보수정치세력은 적자재정을 통한 고용증가 같은 재정정책에 대하여는 한사코 반대하면서도 은행대출의 증가나 통화량의 증가 같은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오히려 자산가치의 상승을 마치 국위선양인양 선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10) 외화의 유입에 따른 새 화폐의 발행도 있으나 이는 논의의 편의상 생략하였다.

<일반상품 시장>은 자유·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등가교환을 지향한다. <일반상품 시장>으로의 적자재정의 유입이 생길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를 만들어 부분적으로는 상품가격의 등귀를 초래하여 부등가교환을 유발할 것이다. 이때 초래되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부분적인 부등가교환을 등가교환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시장의 자발적 움직임이다. 명목상 근로소득도 상승한다. 그런 의미에서 적자재정에 의한 물가상승은 상품가격 상승의 시차가 문제이지 시차만 줄일 수 있다면 오히려 시장왜곡에 대한 좋은 치유제이다.

그런데 <자산시장>으로의 새 화폐의 유입은 채권·채무관계의 팽창, 자산가치의 상승을 초래하고, 채권을 매개로 한 사회적 지배·종속관계의 강화,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의미한다. 근로소득을 명목상으로도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일반상품시장>의 인플레이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자산가치의 상대적 저렴화, 사회적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완화, 채권채무관계를 매개로 한 지배·종속관계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는 신조어는 그래서 나왔다. 재정적자가 시중의 여유자금을 흡수함으로써,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중의 민간자본에게 돌아갈 여유자금을 감소시킨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의 투자지출이 위축되고 실업이 늘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재정적자가 오히려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효과를 낳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보다는 금융정책으로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에는 더 이롭다는 그들의 이기적인 주장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악성인플레이션은 유명한 얘기이다. 정부의 과중한 복지지출로 누적된 재정적자가 악성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인과관계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전쟁배상금문제로 대외채무가 많았던 독일에 재정고문으로 와 있던 미국의 금융야심가 듀리(Dewry)가 주기적으로 채무상환기일이 임박할 때마다 공매도로 마르크화의 가치를 폭락시킴으로써 물자가 궁핍했던 전후 독일의 수입재의 가격을 급등시켜 전반적인 국내물가의 상승과 그로 인한 재정지출의 급증을 초래하여 인과관계를 전도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¹¹⁾ 1970-80년대의 남미의 악성인플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통한 환율공격이 원인이었지만 적자재정지출이 원인인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었다.

3.3 이자율과 통화정책

주류경제학은 이자율에 관해 상이한 두 이론을 내세운다.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과 고전파의 '대부자금설'이 그것이다.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자본의 한계생산력에 좌우된다)와 대부자금의 공급(미래소비와 현재소비의 시간선호에 좌우된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둘을 실질이자율이론과 명목이자율이론으로 구별하여 부르는데 실질이자율은 정부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명목이자율만은 당국이 통화정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고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에 관한 마르크스의 설명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사회적 평균이윤율을 넘어서지 않는 어느 수준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회적 역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만 설명했다. 화폐대부자의 힘이 더 강하면 명목이자율의 결정은 통화량과는 무관하게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의 등식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우리입장에서는 이자율은 계급 간의 세력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통화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화량이야말로

11) Stephan Zarlenga, The Lost Science of Money, American Monetary Institute, 2002, pp. 575-602.

이자율의 종속변수이지 독립변수가 아니다.

사회적 역관계에 의해 이자율이 먼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그 자금수요에 맞추어 대부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도 최근 자기들의 Quarterly Bulletin에서 포스트케인지언의 주장을 옳다고 고백하였다.¹²⁾ 이른바 주류경제학의 통화승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해명해준 것이다. 민간으로부터의 예금이 먼저 입금된 후 그 예금액에 맞추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사실과는 정반대라고 밝혔다. 대출은 저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먼저 있고 저축은 바로 그 대출에 의해 그에 상응하여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은 대출수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출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케인지언의 주장에는 화폐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다. 그들은 현금(cash)이든 예금화폐든 모든 화폐는 일종의 IOU(채무증서)라고 주장하면서(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둘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둘을 구태여 구별하자면 예금화폐는 금융기관의 IOU이지만 현금은 국가의 IOU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입장에서는 국가의 IOU는 국채(Government Bond)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다. 사람들은 화폐로 국채를 사고판다. 국채 즉, 국가의 IOU가 화폐이면 화폐로 화폐를 사고판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금융기관의 IOU인 예금화폐도 현금과 교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금화폐의 시세가 변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국채가격은 수시로 변동한다는 데서 예금화폐와 현금을 교환하는 것과 국채와 현금을 교환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국채는 화폐로 거래되는 일종의 금융자산이지 그 자체가 화폐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화폐는 무엇인가? 화폐는 금융기관의 IOU일 뿐이다. 국가의 IOU는 아닌 것이다. 중앙은행의 IOU가 현금이고 시중은행의 IOU가 예금화폐이다. 현금과 예금화폐는 1:1로 교환되고 시세변동도 없다. 그러나 국가의 IOU인 국채는 시세가 수시로 변동한다. 1:1 교환이 아닌 것이다.

어쨌서 금융기관의 IOU는 화폐가 되는데, 국가의 IOU는 화폐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국가가 금융기관의 채무자로 출발했기 때문이다¹³⁾. 처음부터 국가가 경제주권을 금융자본에게 빼앗긴 때문이다. 국가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금융기관이 발행한 IOU로 상환해야 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일반인들이 납부해야 할 조세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IOU로 국가에 납부토록 금융기관이 요구한다. 후발 자본주의국가들이 이러한 금융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면서, 선진국과는 달리 이들 국가는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처음부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채무자였던 것처럼 취급당해버렸다. 돌팔이 화폐금융전문가들이 선진국에서 배운 금융기법이랍시고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어처구니없게도 국가의 경제주권을 민간의 금융자본에 헌납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같은 경기부양정책이라도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게 부과될 세금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의회가 적자재정의 규모와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량이나 대출

12)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Pages/quarterlybulletin/2014/qb14q1prereleasearticlemoney.aspx>

13) 근대국가의 형성을 가져온 시민혁명과정에는 산업자본가계급뿐만 아니라 근대적 금융자본도 있었다. 근대적 금융과 전근대적 금융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면 ①소비금융을 주로 했던 금융에서 생산금융을 주로 담당하게 된 것, ②대출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요구하던 금융에서 신용만으로 대출하거나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액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금융이 된 것, ③통화주의나 지금주의의 한계에 머물던 금융에서 예금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의 한계를 크게 깨트린 것 등이다.

의 증가(특히 예금화폐의 증가)는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에 대해서도 채무규모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의회에서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래세대의 생산력을 키우는 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반드시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교과서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재정을 한사코 억제하려 든다.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양적완화로 연 1조 달러 이상의 금액이 <일반상품시장>으로는 유입되지 않고 전액 <자산시장>으로만 유입되어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물가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자산가치의 거품이 유지되고 있다.

왜 그들은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러 보전해 주는 것일까? 금융기관은 컴퓨터 키보드만으로도 원하는 만큼 대출해줄 수 있고 대출해준 만큼 이자수입을 받아 챙길 수 있다. 대출비용으로 별다른 지출을 하지 않아도 이자수입이 생기는데 도대체 금융기관이 손실 입을 일이 뭐가 있었을까? 물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채무상환능력을 잃을 경우에만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2008년의 경제위기는 비금융적인 실물부문은 아직 부실하여지지도 않았는데 금융기관부터 부실해진 것이다. 채권회수가 곤란해져서 부실해졌다면 비금융적 부문에 대한 채권상환이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 금융부문에 대한 채권상환이 곤란해졌다는 뜻이다. 금융부문의 회사들이 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까?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손실을 입었을까?

오늘날은 금융시장 거래액의 92%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라고 한다. 이 거래는 한쪽이 이득을 보면 같은 금액만큼 다른 쪽이 반드시 손실을 봐야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파생상품 거래로 손실을 본 금융부문이 너무 큰 손실액 때문에 파산해버리면 상대방 금융부문은 받아야 할 돈만 못 받을 뿐 아니라 파생상품에 투자한 원금마저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들이 발행한 IOU로 투자를 했어도 최종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잔액을 청산해야하기에 최종지불이 어려우면 파산하게 되고 부실자산만 떠안게 된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QE란 이름으로 그 부실자산을 추가로 발행한 화폐와 교환해주고 있다. 그리되면 이는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게임이 된다. 원래 파생금융 부문은 그것이 제로섬 게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대해져도 실물부문에 대한 채권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포지티브 섬게임으로 되면 실물부문에 대한 채권의 증가라는 성격으로 바뀐다. 도박꾼의 세계와 일반사람의 세계는 격리되어 있고 도박꾼이 파산하면 그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들을 구제하면 일반인들이 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자기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옴팍 늘어나는 것이다.

3.4 환율과 환율제도

주류경제학에서는 환율이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그 모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워낙 많은 변수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 스스로 적정 환율 자체를 찾지 못한다. 외화도 <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하나이므로 자산가격의 거품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함께 <일반상품시장>에 물가상승이라는 악재를 제공할 수 있다.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가져온다는 이론이 성립하려면 바로 이런 경로를 반드시 밟아야만 한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참여하는 개인들도 결국은 초인이 아닌 인간이다. 조그마한 소문에도 쉽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정도로 시장을 안정시킬 근거가 없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이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외화공급 자

체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탄력적이지도 않다. 외화준비가 고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면 외부로부터의 차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도 여러 변수에 의해 가로막힐 수도 있다. 금방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목표환율을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시장에서의 환율변동도 목표환율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끔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거시정책(통화, 재정정책)으로 고용, 성장, 물가 등의 변수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하지만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보유외화를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일이 잦다. 결론적으로 환율은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외생변수이다.

4. 세계화폐

금이 아닌 IOU가 세계화폐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첫째, 갚아야 할 대외채무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IMF나 WB 같은 국제채권기관에 채무를 상환할 때 IOU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외채무가 전혀 없는 나라들(당시의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그들이 세계시장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중요 전략물자에 대한 구매대금으로 IOU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은 국내유통에서도 IOU가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수 있게 된 조건과 같다. 즉,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이나 국가에 대한 조세납부를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IOU로 지불토록 강제하면서부터 다른 거래도 불환지폐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차세계대전 직후부터 1971년의 금태환정지에 이르기까지는 미국의 금태환약속이 세계화폐로서의 달러유통을 가능케 했지만, 1971년의 금태환정지후부터는 결국 두 가지 조건이 불환지폐의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 이미 미국은 1971년에 세계 최강의 채권국으로 되어 있었다. 그동안 미국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IOU로 세계전역의 각국 대형금융기관, 기간산업의 주식과 채권을 엄청난 규모(수백조 달러로 추산)로 매집해둔 때문이다. 1971년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자본수지적자누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2) 1971년 10월부터 일본과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요 전략물자였던 석유에 대한 구매대금 결제를 미국 달러로만 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키신저가 비밀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중동의 석유판매대금을 미국의 달러로만 결제토록 사우디가 도와주는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왕가에 대한 군사적 보호와 군현대화를 지원한다는 비밀협약을 맺은 것이다.

그런 약속은 미국의 군사력이 항상 막강하다는 전제 위에서나 효력이 있는 것인데 미국의 군사력이 이란이나 사우디보다 열세임이 드러나게 되면 그 가치를 잃는다.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중동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의 중동전에서는 이란 전투기가 제공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공군력이 오히려 밀린다는 것이다. 예멘처럼 별 힘도 없던 나라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로 미국 패트리엇 방공망을 산산이 찢어버리고 사우디의 주요공항과 군사용 거점을 직격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북한은 미사일 백화점을 차려놓고 세계 각국에 일 년 365일 각종 미사일을 바게인 세일하는 나라'라고 비난할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가 미국의 군사력을 못 믿고 러시아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이 ISIS를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사우디는 ISIS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미국이 셰일석유산업을 키우기 위해 석유감산을 통해 고유가정책을 유지해달라고 사우디를 설득했지만 사우디는 재정수입 격감을 이유로 석유증산으로 오히려 저유가정책을 더욱 밀고 있다. 중동석유와 러시아석유는 더 이상 미국의 달러로는 결제하지 않고, 유로화, 루블화, 위안화로 결

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갚아야 할 대외채무가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지구촌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세계화폐로서의 달러의 역할은 당분간은 유지되고 있다. 이들의 채무는 보통 20년 내지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계약되어 있다. 적어도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달러결제 없이 버티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규로 자금을 빌리는 채무국들은 더 이상 달러 표시가 아닌 다른 외화로 채무를 얻어 쓰고 있다. 2014년 10월 출범한 NDB가 바로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제금융에 대한 패권을 지탱시켜 주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는데 신용카드사용을 위한 국제온라인 네트워크와 현금이체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미국 재무부가 줄곧 장악해왔는데 이것도 우크라이나사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용을 몇 주간 중단하고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브릭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합세하여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새로운 국제결제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신용카드용으로는 UNION과 PRO 100을, 현금이체용으로는 ROSSWIFT를 금년 5월부터 가동 중이다.

세계화폐로서의 미국달러의 역할이 끝나면 무엇이 세계통화의 역할을 맡을 것인가? 혹은 유로화나 위안화를 들먹이지만 그들은 물론 자기나라 통화가 국제적 통용력을 갖는 것을 환영하지만 미국달러처럼 단일통화로서 세계통화가 되는 것만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만약 위안화가 세계통화로 되면 중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를 오랫동안 기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은 지금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보인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도 유로화가 세계화폐로 되면 유럽은 오랫동안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정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도 몇몇 나라의 통화바스켓이 세계통화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역당사국끼리 상대국의 통화나 자국의 통화를 서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세계무역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이제는 수출증대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정책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의 생각이다. 수출을 통한 번영보다는 내수확대를 통한 번영에 더 높은 가치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부합하기 어렵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화폐는 태어날 때부터 상품화폐의 운명을 지녔지만 태어나자마자 관념화폐로 자라날 운명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하나는 사유재산제도가 존중되는 교환경제 속에서 태어났기에 공짜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적생산물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물로 만들기 위해 교환을 매개해야 하는 순수거래비용 때문이었다. 이 모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주기적 공황상태를 초래한 (본질적 요인은 아니지만)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결국은 관념화폐의 완성이라 볼 수 있는 불환지폐제도가 공황의 근원적 타개책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여태까지 시장경제를 괴롭혀 왔던 상품화폐와 관념화폐 사이의 모순은 일단 표면에서는 사라졌으나 또 다른 새로운 모순으로, 비생산적 기생계급(금융부문)과 생산적인 산업계급(실물부문) 간의 사회적 모순으로 전화(轉化), 발전하였다. 금융계의 IOU란 형태로 출현한 관념화폐는 사회적 역관계의 산물이었고, 세계화폐 차원에서는 국제정치역학의 산물이었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화폐가 이제는 공짜로 보이겠지만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폐는 사회양

극화를 극단으로 발전시켜 역사적으로는 국제역학관계와 사회적 역학관계의 대전환을 촉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불환지폐도 결국 공짜점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화폐의 역사는 권력의 기록이고 화폐이론은 권력의 분식(粉飾; decoration)이다. 경제학에서의 화폐이론은 지금껏 진실을 감추고 호도하는 것에만 급급했으며 억지주장과 매수로 아카데미세계를 농락했다. 화폐수량이론, 대부자금이론, 유동성선호이론, 구매력평가설, 국제수지설 등이 바로 그들의 추악한 면모를 가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순수한 탐구심을 오염시키고 회유함으로써 연구자체를 왜곡시켜 왔다.

자국의 통화가 국제화폐가 된다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었다. 국제화폐가 되면 장기간의 무역적자를 감내해야하고 국내일자리들을 해외로 내보내어야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금융부문을 장악한 비생산적 기생계급에게만 축복일 뿐이고 그 나라의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 아닌 저주로 된다. 최근 국제역학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특정 국가의 IOU가 세계화폐로 유통되던 권력토대에 균열이 생겼다. 요지부동인 줄만 알았던 달러기반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각국은 재빨리 경제적 자주권을 탈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거래에서 달러화를 통한 결제 대신 자국통화/상대국통화로 결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은 화폐형태가 금융계의 IOU로부터 국가의 IOU로 옮겨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화폐는 자원의 미세한 이동과 배분을 지휘하는 지휘봉이다. 민주적 권력이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면 화폐 즉, 국가의 IOU는 민주적 경제계획을 위한 기술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행(1997), “자본의 금화와 현재의 중앙은행권”: 이론 16호.
- 김종철(2015), “화폐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 미발표 원고
- 김창근(2005b), “맑스의 전형과 화폐의 가치”, 經濟學研究, 제55집 제2호.
- 배인철(1994), “맑스의 화폐론에 대한 검토”, 사회경제평론, 7호, 한울.
- 이채언(2013), “마르크스 가치이론에 있어서 닫힌 가치체계와 열린 가치체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2호, pp. 129-158
- 이채언(2006), “케인스화폐이론과 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연구, 제3권 제1호,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제프리 잉햄(2011), 『돈의 본성』 홍기빈 역, 서울: 삼천리.
- 조복현(1997) 현대 화폐제도의 불안정성과 화폐의 가치기초. 사회경제평론. 10호. 풀빛. 1997.
- 최진배(1997) 지폐유통의 법칙과 은행권유통의 법칙: 사회경제평론. 10호, 풀빛.
- Bank of England (2014), “Money in the Modern Economy” &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Pages/quarterlybulletin/2014/qb14q1prereleasearticlemoney.aspx>
- Bell, Stephanie (2001),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Hierarchy of Mone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No. 25, 149-163.
- Bellofiore, Riccardo (1989) ‘A Monetary Labor Theory of Valu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21 (1&2): 1-25, <http://rtp.sagepub.com>.
- Bernanke, Ben S. (1995) The Macroeconomics of Great Depression: A Comparative Approach.

-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7, No. 1,
- Bordo, Michael D. and Anna J. Schwartz (1984) A Retrospective on the Classical Gold Standard, 1821-1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www.nber.org/books/bord84-1>
- Bordo, Michael D. and Eichengreen, Barry (1998) The Rise and Fall of a Barbarous Relic: The Role of Gold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NBER, MA. Cambridge.
- Brühoff, Suzanne De. (1976) Marx on Money. Translated by Maurice J. Goldbloom. Urizen Books. New York.
- Carchedi, Guglielmo (1991)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 Verso. London & New York.
- Eichengreen, Barry (1989) The Gold Standard Since Alec 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ley, Department of Economics.
- Eichengreen, Barry and Peter Temin (2000) The gold standard and the great depression: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 Eichengreen, Barry and Peter Temin (2010) Fetters of gold and paper: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26. Number 3.
- Fawley, B.W. and C.J. Neeley (2013) Four stories of quantitative easing: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January/February, 95(1), <http://research.stlouisfed.org>.
- Fisher, Irving and assisted by Harry G. Brown (1920)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Its Determination and Relation to Credit Interest and Crises.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 Foley, Duncan K. (1983) On Marx's Theory of Money. Fred Mosely ed. Palgrave, Macmillan.
- Ganssmann, Heiner (1988) 'Money as a Symbolically Generalised Medium of Communication? On the Concept of Money in Recent Sociology' Economy and Society 17 (3): 285-316.
- Germer Claus M. (1998) The concept of the 'gold standard' and the misunderstandings of political economy. researchgate.net
- Hampton, Matthew (2003) The Return of Scarcity and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Money After the Collapse of Bretton Woods. The Commoner N.7, <http://www.thecommoner.org>.
- Huber, Joseph (2013) Modern Money and Sovereign Currency. <http://sovereignmoney.eu>.
- Jessop, Bob (2014) Credit money, fiat money, and currency pyramids: reflections on the financial crisis and sovereign debt. books.google.com.
- Kliman, Andrew and Shannon D. Williams (2012) Why 'Financialization' Hasn't Depressed U.S. Productive Investment: For presentation at the association for Hetrodox Economics conference 2012. Paris.
- Krugman, Paul (2000) Thinking About the Liquidity Trap: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14, available online at <http://www.idealibrary.com>.
- Lapavitsas, Costas (2003) Money as 'Universal Equivalent' and its Origin in Commodity Exchange. Department of Economics, SOAS,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 Lavoie, Don (1998) Marx, the quantity theory, and the theory of valu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Duke University Press.
- Lipietz, Alain (1982) 'Credit Money: A condition permitting inflationary crisi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4 (2): 49-57.
- Marx, Karl (1858) Commercial Crises and Currency in Britain. 1858.8.10. NYDT. MECW. Vol. 16.
- Marx, Karl (1859) Engl. trans. from Marx/Engels, Werke, Band XIII, Dietz Verlag, Berlin 1964,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0.
- Marx, Karl (1976) Capital, Vol. 1, Pelican Books.
- Mitchell, Bill (2009) Money multiplier and other myths, <http://bilbo.economicoutlook.net/blog/?p=1623>
- Mitchell, Bill (2010) There is no financial crisis so deep that cannot be dealt with by public spending, still!, 11 October 2010, <http://bilbo.economicoutlook.net/blog/?p=11854>
- Mosler, Warren (2010) Seven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 Valance Co., 2010,

ISBN 978-0-692-00959-8;

- Moseley, Fred (2005) *Marx's Theory of Money: Modern Appraisals*. Mount Holyoke College, Palgrave Macmillan, MA, USA.
- Nelson, Anita (1999) *Marx's Concept of Money; the God of Commodities*. Rutledge, London.
- Vilar, Pierre (1969) *A History of Gold and Money 1450-1920*. London, New Left Books.
- White, Lawrence H. (2008) *Is the Gold Standard Still the Gold Standard among Monetary Systems?* Cato Institute, Washington.
- Wray, L. Randall (2001), "The Endogenous Money Approach", Working Paper No. 17, [Center fo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 Wray, L. Randall (2004) "State Money",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2, no. 3, Fall, pp. 23-40.
- Wray, L. Randall (2010) "Money", Working Paper No. 647,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 Wray, L. Randall (2012) *Introduction to an Alternative History of Money*. Working Paper No. 717.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 Zarlenga, Stephan (2002) *The Lost Science of Money*, American Monetary Institute, N.Y., 2002.

<Abstract>

Some Critical Issues in Marx's Theory of Money Revisited

Chai-On Lee, Prof.
Faculty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oney is a commodity (as a product of labor) in the sense that there can be no free lunch in market exchange but it cannot help being transformed into an abstract symbol on account of the pure transaction costs. Such a contradiction made economic crises periodically occur. To prevent those crises they resolved the contradiction by more and more divesting money of its commodity character. The fiat money is an IOU issued by the banking system to replace the gold standard and it transformed the contradiction within commodity exchanges between commodity money and abstract money character into another social antithesis between the 1% of the society and the rest of it. In this fresh perspective, we have reexamined in this paper the theories of inflation and those of interest rates and foreign exchange rates, etc.